

“중앙집권 사고 벗어나 인구감소·낙후지역 지원 강화해야”

‘국가균형발전 시즌2’ 성공하려면

정부 여당의 국가균형발전 대책은 세종시로의 국화·청와대·정부부처 이전, 기존 및 충청권 신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충청권을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며, 호남권만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국토의 불균형 정도를 파악한 뒤 인구 감소·낙후지역부터 강력한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집권 사고 탈피 지방중심 정책 추진 ▲지역 SOC(기반시설)의 균등 대책 마련 ▲인구 감소·낙후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명실상부한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육성 및 지원 ▲대기업 지방 이전 권장 및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인센티브 등 5대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집권에서 탈피, 지방 중심으로 정책 펴야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강조되고 있으나 청와대, 정부부처, 여당 등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지자체, 시도당 등은 이에 따르는 구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열악한 재정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지자체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관리·감독, 지시 등을 외면할 수 없는데다 지역이 자립해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 인사, 사업 등에 있어서 중요한 사무를 지자체에 넘겨주고,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중앙의 시각에서 지방에 시혜를 베풀는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호남권 등 특정 지방의 인구·자본 유출로 인해 수도권에 비대해지면서 이를 분산시키는 대책 역시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이라는 한 지역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국토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균등한 기반시설 설치로 전국이 동일한 공공 서비스 누리야
도로·항만·공항·공원 등 전국 곳곳의 기반시설을 균등하게 설치해 국민 모두가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누리도록 해야 수도권은 물론 영남권, 충청권 등 특정지역에만 인구·자본이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 역시 국가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이 가장 열악한 전남의 경우 그동안 규제,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연·축소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흑산공항이 있다. 섬 지역 접근성 개선, 섬·육지 연결을 통한 관광산업 증진,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지난 2008년 추진에 나섰으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가로막혀 사실상 중단 상태다.

2025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개통 시기를 보다 앞당기고, 전라선(전북 익산-여

흑산공항 등 지역 SOC 균등 대책 마련
젊은층 위해 대학·대기업 지방이전 권장

국회·靑·정부부처 등 세종시 이전
자칫 호남권만 고립될 우려도

수) 고속철도 사업도 정부 정책에 반영해 수도권·영남권·충청권만이 아니라 호남권도 ‘2시간대 생활권’을 누리야 한다는 점을 전담도는 강조하고 있다.

◇인구 감소·낙후지역에 대해 강력한 지원이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낙후·소멸지역에 대한 지원 법률, 제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전담도는 오는 9월까지 용역을 통해 경북도와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시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가 경북도와 공동으로 마련중인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에는 낙후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대형 연구시설 우선 배정 ▲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지원 ▲농어촌 지역 고향사랑세 도입 ▲지방세제 혜택 ▲농어촌 주택 1기구 2주택 세제 특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남도는 8월 중 법안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하반기 법률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30대 위해 대학·대기업 지방으로의 이전 권장
통계청에 따르면 지방의 20·30대가 직업, 교육, 주택 등의 사유로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있다. 지방 출신인 이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정착하면서 새로운 아파트 수요를 창출할 것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지방에 머물러 거주할 수 있는 대책이말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질 높은 대학과 대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시키거나 지방 소재 대학과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본사의 80%, 유명 대학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면서 인구와 자본을 끌어당기고 있어 이를 인센티브로 이전을 권장하거나 패널리로 강제하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등록금 국가 지급, 공무원 우선 채용 혜택 등 지방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전남도가 ‘1000억 투자 유치 프로젝트’ 추진에 나섰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보다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금 혜택, 부지 제공, 정부 자금 지원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6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손을 들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전대 열기 속으로... 친문 표심 최대 관심

고 박원순계 지지층 선택 변수로
당권주자-최고위원 합동연설회 주목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에 본격화 하면서 그동안 당 표심을 이끌었던 ‘친문’의 선택과 운명 ‘전대 흥행 여부’ 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마무리된 광주·전남 각 지역위원회 전국대의원 선정 과정에서도 일부 친문 인사들이 대의원에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문(친문재인)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길 잃은 조지’의 선택과 당권주자와 최고위원 후보군 간, 최고위원 후보들 간 합동연설회이 승부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 안팎에선 결국 전대 결과를 가를 일차적 변수는 주류인 친문계의 표심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세론’을 형성한 이낙연 후보에게 지지세가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후보의 독주체제를 향한 친문 진영 내 견제심리가 김부겸 후보에게

■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순회연설회 일정

지역	날짜	시간	장소
경남		10:30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
부산	8.1 (토)	13:30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321~323호
울산		16:30	울산 오도밸리복지센터 실내체육관
대구	8.2 (일)	14:00	대구 엑스코 5층 오도토리움
경북		16:00	대구 호텔 인터볼고 엑스코 아이리스홀
광주	8.8 (토)	10:30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208~213호
전남		14:30	전남도당 회의실
전북	8.9(일)	14:00	전주 그랜드힐스호텔 그랜드볼룸
충남		10:00	천안 소노벨 1층 그랜드볼룸홀
세종	8.14 (금)	13:00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장
대전		16:00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연병홀
충북	8.16(일)	14:00	청주 CJB 컨벤션센터 달의여신홀
경기	8.21(금)	15:00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
인천	8.22 (토)	10:30	인천로얄호텔 영빈관 다이아몬드홀
서울		14: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대법원 확정판결로 기사화생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등장으로 대구 구도가 양강 대결

로 재편됐고 고 박원순 시장 지지층의 선택 여부도 전당대회 주요 변수다.

이에 김부겸 후보도 최근 광주에 사무실을 내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호남 공략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박주민 후보의 등장도 주류 표심의 변수로 떠올랐다. 박 후보는 2018년 전대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기록하며 친문 권리당원들의 지지기반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아직 뚜렷한 연대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는 상태지만, 향후 짝짓기가 본격화하면 전대 구도가 출렁일 수 있다. 과거 당권 주자를 중심으로 최고위원 후보군이 결집하거나 권역별 최고위원 후보군 간 손을 잡으며 지지세를 넓혔던 것 연대를 통한 지지율 뒤집기도 가능한 상태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 박원순 시장을 지지층이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하려는 움직임은 없지만 이들의 전략적인 선택도 예상되며 이재명 지사가 대권 후보로 부상한 것도 민주당 전당대회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양향자 의원 민주 최고위원 사실상 확정

선출직 5명 중 여성 몫 할당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이재정 의원과 정광민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가 탈락했다.

최고위원 선출직 5명 중 1명을 여성 몫으로 보장한 당규에 따라 본선 진출자 중 유일한 여성인 양향자(서구을) 의원은 최고위원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관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26일 “내달 29일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는 노웅래(4선) 이원욱(3선) 김종민 소병훈 신동근 한병도(이상 재선) 양향자(초선)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 8명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예비경선 투표 진행해 이 같이 결정했다.

양 의원은 “광주 정신으로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시대 열겠다”면서 “최고위원 출마자 중 유일한 광주·전남 후보, 호남을 대변하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당 위원장과 대의원을 선출하는 지역 경선은 오는 25일 제주도부터 시작된다. 이어 강원(7월 26일), 부산·울산·경남(8월 1일), 대구·경북(2일), 광주·전남(8일), 전북(9일), 대전·충남·세종(14일), 충북(16일), 경기(21일), 서울·인천(22일)에서 열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진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